幸福의 經濟學: 政策的 含意

李 俊 求

經濟政策의 궁극적 목표는 국민의 經濟的 福祉 혹은 幸福感을 증진시키는 데 있다. 그런데 일반 사람들의 생각과 달리, 더 많은 所得이 반드시 더 큰 행복감을 가져다주지는 않는다. 따라서 맹목적인 經濟成長의 極大化를 추구하기보다는 국민의 행복감 증진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중요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이 바로 位置財의 성격을 가진 상품이다. 위치재의 본질상 이것을 소비함으로써 얻는 만족감은 일시적일 수밖에 없다. 소득이 늘어나도 추가적인 소득이 위치재에 대한 지출로 쓰이면 행복감은 더 커질 수 없다.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위치재로 住宅과 私敎育을 들 수 있는데, 현재 우리 국민이 느끼는 불만이 바로 이들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 주택과 사교육에 많은 돈을 쏟아 부어야 하는 현실이 우리 국민을 불행하게 만드는 주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국민이 위치재에 대한 지출을 줄이기로 합의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바로 이 역할에 정책의 초점을 맞출 때 주택과 사교육 정책이 비로소 제자리를 찾을 수 있다.

1. 머 리 말

우리가 經濟成長에 대해 그토록 많은 관심을 갖는 이유는 이를 통해 국민의 經濟的 福祉가 더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는 길이 열릴 수 있다는 기대 때문이다. 경제성장만이 경제적 복지를 높일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아닐지라도, 이것이 가장 직접적이고 효율적인 수단이라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경제성장이 뒷받침 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제적 복지의 획기적인 향상은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경제성장이 어느 경우에서나 경제적 복지의 향상으로 곧장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경제는 계속 성장해 가고 이에 따라 국민의 所得水準이 점차 높아지면서도 경제적 복지의 수준은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는 현상이 종종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어떤 나라의 특수한 상황 때문에 예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고, 대부분의 부유한 나라에서 상당히 보편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일반적으로 경제성장의 초기 단계에서는 성장이 바로 경제적 복지의 향상으로 이어지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난다. 이 단계에서는 기본적인 衣食住조차 제대로 해결되지 못한

상태여서 경제성장을 통한 소비 가능성의 확대는 곧바로 경제적 복지의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지난 몇 십 년 동안 우리가 경험해 온 것처럼, 이 단계에서 經濟的 福祉와 國民所得의 추이는 거의 비례관계에 가까운 양상으로 상승곡선을 그리게 된다.

이와 대조적으로, 경제가 충분하게 성숙된 단계에 도달한 경우에는 경제성장이 가져다 주는 경제적 복지의 향상폭이 이보다 더 작아지게 된다. 이 단계에서는 추가적인 소득이 기본적인 물질적 요구를 충족시키는 데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다양하고 고급스러운 상품을 소비하는 데 주로 사용된다. 이로 인한 경제적 복지의 향상폭은 기본적인 물질적 요구가 충족되는 경우에 비해 그리 크지 않은 것이 보통이다. 개인이 얻는 소득의 限界效用이 遞減하듯, 국민소득의 증가에 따른 경제적 복지의 향상폭도 점차 줄어드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다.

만약 국민의 전반적 소득수준이 엄청나게 높은 수준으로 올라 모든 物質的 欲求가 완전히 충족된 상태라면 경제성장으로 인한 경제적 복지의 향상폭은 0의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다. 그러나 그 정도로 높은 국민소득 수준을 실현한 나라는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다. 그렇다면 어떤 나라의 경우에도 경제성장으로 인한 추가적 소득이 비록 작은 폭이기는 하지만 국민의 행복감을 높여주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어디에서든 아직까지는 "많을수록 더 좋다."(The more, the better.)는 말이 계속 설득력을 가질 것이라는 뜻이다.

그런데 우리가 先進國이라고 부르는 부유한 나라들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는 이와 다른 결과를 보여 주고 있다. 즉 대부분의 나라에서 지속적인 소득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느끼는 행복감의 정도는 예전에 비해 높아지지 않았다는 조사결과가 나타났던 것이다. 뒤에 좀 더 자세하게 논의하겠지만, 엄밀히 말해 사람들이 느끼는 幸福感과 經濟的 福祉는 서로 다른 개념이다. 그러나 이 둘 사이에는 매우 밀접한 相關關係가 있기 때문에 행복감의 수준이 높아지지 않았다는 것은 경제적 복지의 수준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는 것과 마찬가지 뜻이라고 말할 수 있다.

최근 경제학계에서는 경제성장이 곧바로 경제적 복지의 향상으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문제의 해결 방안에 대한 관심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관심은 소위 '幸福의 經濟學'(economics of happiness)이라고 불리는 분야의 등장을 가져오게 되었다.(1) 아직은 이론적 발전의 초기단계에 머물러 있어 '理論'이라는 이름을 붙이기조차 약간 어색한 감이 있지만, 기존의 경제이론이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던 부분을 어느 정

(1) Layard(2005)는 *Happiness: Lessons from A New Science*라는 책을 통해 행복의 경제학이 추구해야 할 과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도 설명해 주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

행복의 경제학은 국민의 평균적 소득수준이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더욱 행복해졌다고 느끼지는 못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한 관심에서 출발하고 있다. 나아가 소득의 증가가 더 이상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못한다면 관심의 초점을 경제성장에만 맞출 것이 아니라 그 이외의 다른 목표에도 맞춰야 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의문을 제기한다. 이와 같은 의문은 현 시점의 우리 경제, 사회의 관점에서 볼 때도 매우 시의 적절한 것이 아닐 수 없다.

고도성장의 시대가 이미 흘러갔는데도,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成長의 神話'를 신봉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남아 있다. 이들은 경제성장이 마치 경제의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해 주는 만병통치약이라도 되는 듯 생각하고 있다. 이들이 볼 때 우리 경제의 성장률이 2%나 3% 수준으로 떨어진다는 것은 우리 경제가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현재 우리 경제가 보이고 있는 모든 병폐를 낮은 경제성장률과 연관시켜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그들의 시각이다.

경제가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만드는 윤활유의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경제성장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다. 그 동안의 경험을 통해 잘 알 수 있듯, 경제성장률이 높을 때는 경제의 각 부문이 순조롭게 움직여 가게 된다. 또한 해마다 노동시장으로 유입되는 신규 인력을 제대로 흡수하기 위해서도 어느 정도의 성장이 필수불가결한 전제조건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成長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經濟政策의 초점이 맞춰지는 것은 당연한 선택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경제성장만 이루어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리라는 부질없는 기대를 가져서는 안 된다. 우리 경제, 사회의 이곳저곳에서 그 동안의 맹목적인 成長率 極大化 정책이 가져온 병폐를 발견할 수 있다. 사상 유례 없이 높은 성장률을 달성했지만, 경제적 복지의 수준은 그만큼 빨리 상승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짐작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조심스런 평가이기는 하지만, 이제 우리 사회는 경제성장 그 자체만으로 경제적 복지의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는 없는 단계에 이른 것 같은 느낌이다. 어찌 되었든 이제는 성장의 신화를 과감하게 벗어던져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요즈음 우리 사회를 보면 경제적인 측면에서 사람들이 느끼는 불만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져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무엇 하나 제대로 돌아가는 것이 없다는 불평을 하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가고 있다. 이는 최근 들어 우리 국민이 누리는 경제적 복지가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상황을 초래한 책임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政府의 몫으로 돌려지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모든 문제의 핵

심은 成長을 도외시하고 分配에만 정책의 초점을 맞춘 현 정부의 실책에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국민이 그리 행복하지 못하다고 느끼게끔 된 데 대해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은 사실이다. 대부분의 부유한 나라에서도 소득의 증가가 경제적 복지의 향상으로 이어지지 않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그런 현상이 나타나야 할 필연적인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다. 적절한 정책적 대응을 통해 경제적 복지의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길이 없지는 않은데도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 점에서 본다면 부유한 나라의 정부도 부적절한 대응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우리의 경우 그 부적절성의 정도가 훨씬 더 컸다는 데 있다.

그렇다면 그 동안 우리 정부가 취해온 정책은 어떤 점에서 비판을 받아야 하는 것일까?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는 대로 성장의 측면을 도외시하고 너무 성급하게 分配政策을 추진한 것이 문제의 본질일까? 아니면 政策의 一貫性이 결여되어 기업과 소비자들을 혼란의 상태로 빠뜨린 것이 문제의 본질일까? 물론 이런 것들이 상황을 악화시키는 데 일조를 한 것은 어느 정도 사실이지만, 문제의 본질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성장을 중시하는 기조로 바꾸고 정책의 일관성을 회복한다 해서 과연 국민이 얼마나 더 행복하게 될지는 자신 있게 말하기 힘들다.

우리 국민이 행복하게 느끼도록 만드는 데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은 다른 곳에서 찾아야 한다. 그 정책의 탐색 과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낡은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는 일이다. 종래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시각에서 문제의 해법을 찾으려 하는 획기적인 發想의 轉換이 필요한 것이다. 이제는 성장이 우선되어야 하느냐 아니면 분배가 우선해야 하느냐는 식의 케케묵은 논쟁을 청산할 때가 되었다. 그 논쟁 자체가 생산적이지 않을 뿐더러, 종전과는 아주 다른 새로운 접근방법이 필요한 단계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이 논문에서 특히 주목하고 있는 것은 우리 사회의 住宅과 私敎育 政策이다.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경제적 복지는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는 주요한 이유를 바로 이 주택과 사교육 정책의 실패에서 찾고 있기 때문이다. 주택과 사교육은 자신이 얼마만큼을 소비하느냐도 중요하지만 남들이 얼마만큼을 소비하느냐가 더 큰 중요성을 갖는다는 점에서 여느 상품과 다른 성격을 갖고 있다. 바로 이 특성 때문에 이에 대한 지출이 주는 만족감은 지속적일 수 없고 단지 일시적인 것에 그칠 뿐이다.

주택과 사교육이 갖는 이와 같은 특성을 제대로 이해해야만 적절한 정책대응이 가능해진다. 그런데도 지금까지는 명확한 哲學의 뒷받침 없이 단지 겉으로 드러난 증상만을 완

화하려 하는 消極的인 政策으로 일관한 나머지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표류를 거듭해 왔다. 국민의 경제적 복지 향상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정책으로 탈바꿈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출발점부터 바꿔야 할 필요가 있다. 幸福의 經濟學이란 관점에서 우리 사회의 주택과 사교육 정책을 재조명하고, 어떻게 정책의 새 틀을 짜야 국민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지를 탐색해 보는 데 이 논문의 주안점이 있다.

2. 經濟成長과 經濟的 福祉

2.1. 經濟的 福祉와 主觀的 幸福感

경제성장과 경제적 복지 사이의 관계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전에 우선 '經濟的 福祉' (economic welfare)를 어떻게 측정하느냐의 문제에 대해 잠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경제적 복지라는 말은 어떤 사회의 구성원이 물질적 측면에서 느끼는 만족감의 정도를 나타내는 말로 흔히 사용된다. 개인이 느끼는 物質的 滿足感을 가리키는 말로서 쓰이기도 하지만, 개인의 경우에는 '效用' (utility)이란 말을 쓰는 경우가 더욱 많다.

그런데 효용이 되었든 경제적 복지가 되었든, 사람들이 느끼는 물질적 만족감은 客觀的인 측정이 어렵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사람들이 느끼는 主觀的인 감정을 객관적인 단위로 측정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일 수밖에 없다. 최근 일부 경제학자는 그와 같은 주관적인 감정을 뇌파측정 등의 방법을 통해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하지만, 이에 공감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2)

따라서 행복의 경제학에서 말하고 있는 경제적 복지라는 것이 사실은 다른 것을 뜻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다. 다시 말해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경제적 복지는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한다."라고 말할 때, 엄밀하게 측정된 경제적 복지의 수준에 대한 통계자료에 기초해 그와 같은 말을 하는 것은 아닌 경우가 많다는 뜻이다. 그와 같은 말을 하는 배경을 살펴보면,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행복감을 느끼고 있느냐는 설문조사의 결과에 그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경제성장이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행복감을 느낀다고 대답하는 사람의 비율은 거의 늘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보고 그런 말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이다.

이와 같이 설문조사의 결과로 알아낸 행복감의 정도를 경제적 복지의 代理變數(proxy)로 사용하는 데는 몇 가지 문제가 있다. 무엇보다도 우선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설문조사

(2) 예를 들어, Layard(2005)는 그 동안의 기술적 발전에 힘입어 이제는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말한다.

의 결과에 어느 정도의 신빈성이 있느냐는 것이다. 설문조사의 방법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은 널리 알려져 있는데, 사람들이 느끼는 행복감에 대한 조사에서도 그런 문제점들이 그대로 나타날 것임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종전에 비해 행복해지지 않았다고 대답한 것을 보고 경제적 복지의 수준에 아무 변화가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행복감이란 것이 물질적 측면에서의 만족감을 나타내는 경제적 복지와는 다른 개념이라는 데 있다. 사람들이 현실에서 얼마나 큰 행복감을 느끼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심리학자들은 '主觀的 幸福感'(subjective well-being)이라는 개념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이 주관적 행복감은 오직 생활의 物質的 측면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가족이나 친우관계, 건강, 심리상태, 나아가 정치적, 사회적 여건 같은 많은 非物質的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3) 따라서 사람들이 느끼는 행복감의 정도와 경제적 복지의 수준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국민이 느끼는 주관적 행복감이 높아지지 않은 데에 앞서 예로 든 비물질적 요인들이 크게 작용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예컨대, 경제가 성장하고 사람들의 소득수준이 점차 높아지는 과정에서 가족이나 친우관계에 급격한 변화가 오고, 바로 이것이 사람들이 느끼는 주관적 행복감을 끌어내리는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행복감의 정도에 관한 설문조사의 결과를 보고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복지는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리는 것은 위험한 일일 수 있다.

경제성장 과정에서 행복감에 영향을 주는 비물질적 요인들에 어떤 변화가 오는지를 한마디로 말하기는 힘들다. 어떤 것은 행복감을 더 크게 만드는 방향으로 변화하기도 할 것이며, 다른 것은 행복감을 더 작게 만드는 방향으로 변화하기도 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전반적인 변화의 방향이 행복감을 더 작게 만드는 쪽일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 사실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個人的, 社會的 要因들이 所得水準과 어떤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으리라고 생각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이런 개인적, 사회적 요인들은 소득수준과 관련 없이 그 자체의 논리에 의해 변화해 갈 가능성이 크다.

바로 뒤에서 다시 설명하게 되겠지만, 설문조사의 결과 主觀的 幸福感의 가장 중요한 결정요인은 所得水準인 것으로 드러났다. 사람들이 느끼는 행복감이 성별, 나이, 인종, 교

(3) 심리학자들의 설명에 따르면, 주관적 행복감은 단순히 어떤 사람이 느끼는 쾌락의 정도에 대한 평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살고 있는 사회의 準據틀(frame of reference)에 의해 판단할 때 '좋은 삶'(good life)을 살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한 평가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요인들이 주관적 행복감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다. 이 점에 관한 좀 더 자세한 논의에 대해서는 Diener and Suh(2000)을 참고하기 바란다.

육수준, 결혼 여부 등에도 영향을 받기는 하지만, 소득수준이 미치는 영향에 비하면 부차적인 데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행복감의 수준을 결정하는 데도 소득이라는 물질적 요인이 비물질적 요인에 비해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주관적 행복감과 경제적 복지는 거의 같은 의미를 갖는 개념이라는 것을 강하게 시사해 주고 있다.

따라서 주관적 행복감에 대한 설문조사의 결과를 보고 "經濟成長에도 불구하고 經濟的 福祉의 수준은 높아지지 않았다."는 평가를 내린다고 해서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 설문조사의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여 "經濟成長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느끼는 幸福感은 더 커지지 않았다."라는 데서 출발한다 해도 이 글에서의 논의에는 아무 영향이 없다. 이 글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바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느냐에 있으며, 그러므로 경제성장만으로는 사람들을 더욱 행복하게 만들 수 없다는 것 역시 좋은 출발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2.2. 所得水準과 主觀的 幸福感 사이의 關係

그 동안 "더 많은 소득이 사람들에게 더 큰 행복감을 가져다 주는가?"라는 의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한 設問調査가 여러 차례 시행된 바 있는데, 이 설문조사의 결과는 매우 일관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즉 모든 경우에서 더 많은 소득이 더 큰 행복감을 가져다 준다고 말하기는 힘들다는 것이다. 물론 아주 가난한 나라의 국민에 비해 그보다 훨씬 부유한 나라의 국민이 느끼는 행복감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나 있기는 하다. 또한 아주 가난했던 나라의 국민소득이 올라가면서 이 나라 국민이 느끼는 행복감이 점차 커지는 경향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소득수준과 행복감의 정도 사이에 별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도 많이 관찰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所得水準과 사람들이 느끼는 幸福感 사이의 關係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각도에서 관찰될 수 있다. 첫째로, 어느 한 나라를 조사대상으로 삼아 그 나라 사람들 사이에서 양자 사이의 관계가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는지 알아볼 수 있다. 예컨대, 어떤 사람의 연간 소득이 5천만 원이고 그 이웃에 사는 사람의 연간 소득은 1억 원이라고 할 때, 과연 이웃 사람이 느끼는 행복감의 정도가 더 큰지의 여부를 알아보는 방법이다. 이는 어떤 사람의 연간 소득이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늘어남에 따라 그가 얼마나 더 행복하게 느끼게 될지를 짐작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비교라고 말할 수 있다.

둘째로, 한 시점에서 소득수준이 다른 여러 나라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해 과연 부유한 나라의 국민이 가난한 나라의 국민보다 더욱 행복하다고 느끼는지의 여부를 조사하는 방법이 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所得水準이 높은 나라의 국민일수록 더 높은 經濟的

福祉를 누리고 있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과연 이와 같은 기대가 현실과 그대로 부합하고 있는지는 별도의 검증을 필요로 하는 문제다. 현실을 보면 부유한 나라에 살면서도 불행해 보이는 사람이 많은 한편, 가난한 나라에 살면서도 행복해 보이는 사람 역시 많은 것을 관찰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는 어떤 한 나라를 조사대상으로 삼아 그 나라가 成長해 가는 과정에서 국민이 느끼는 幸福感이 어떤 變化의 양상을 보이는지를 관찰하는 방법이다. 이와 같은 관찰을 통해 이 글에서 제기하고 있는 핵심적인 질문, 즉 경제성장이 경제적 복지의 향상으로 직결되느냐는 의문에 대해 직접적인 답을 얻을 수 있다. 다만 나라마다 다른 특수한 여건이 경제성장과 경제적 복지 사이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을 것이므로, 많은 수의 나라를 관찰대상으로 삼아야 좀 더 일반성이 있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소득수준과 사람들이 느끼는 행복감 사이의 관계에 대한 초기의 연구결과들은 이스털린〔Easterlin(1974)〕에 의해 잘 정리된 바 있는데, 이를 보면 이 세 가지 방법에 따른 조사결과가 양자 사이의 관계에 대해 각각 다른 답을 주고 있다는 흥미 있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우선 첫 번째 방법, 즉 한 나라 안의 사람들 사이에서 소득수준과 행복감 사이의 관계를 조사한 연구결과는 소득수준이 높은 사람일수록 더욱 행복하게 느낀다는 상식적인 기대가 현실과 그대로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예를 들어, 1970년 12월 미국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가장 낮은 소득계층에 속하는 사람 중 '매우 행복하다'(very happy)고 느낀다는 대답을 한 사람은 고작 29%에 불과한 반면, 가장 높은 소득계층에 속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 비율이 56%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4) 다시 말해 最高 所得階層에 속하는 사람 중 현재의 생활이 매우 만족스럽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율은 最低 所得階層에 비해 거의 두 배나 높은 것을 볼 수 있는 것이다. 이 두 계층 사이의 中間 所得階層의 경우에도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매우 행복하다는 응답을 한 사람의 비율이 일관되게 증가하는 현상을 관찰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스털린은 이와 같은 조사결과의 一般性이 얼마나 큰지 확인하기 위해 12개국에서 행해진 29개의 추가적인 설문조사 결과를 검토해 보았다. 그 결과 이 모든 설문조사에서 소득수준이 높은 계층일수록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람의 비율이 더 높아지는 경향이 명확

(4) 이 설문조사에서는 사람들이 현재 자신의 상태가 '매우 행복하다'(very happy), '상당히 행복하다'(fairly happy), '별로 행복하지 않다'(not very happy)의 세 가지 중 하나라고 대답하게 끔 되어 있다. 이스털린이 정리한 바에 따르면 낮은 소득계층일수록 '별로 행복하지 않다'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점차 커지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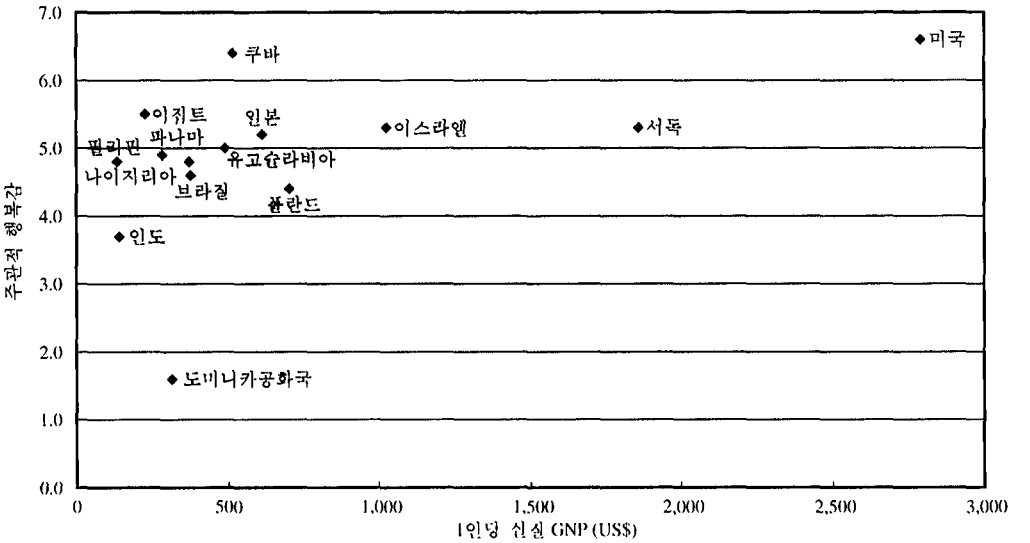
히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나아가 그는 사람들이 느끼는 행복감에 대한 다른 많은 연구들에서도 이와 똑같은 결론이 나왔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 연구들에 따르면 사람들이 느끼는 행복감이 성별, 나이, 인종, 교육수준, 결혼 여부 등에도 영향을 받기는 하지만, 소득수준이 미치는 영향에 비하면 부차적인 데 지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한다. 결론적으로 말해 한 시점의 한 나라 안에 사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더 많은 所得이 더 큰 幸福感을 가져다 준다는 상식적 기대가 현실과 완전히 부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두 번째, 세 번째 방법에 의한 調査結果는 이와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여 주고 있다. 우선 한 시점의 여러 나라를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를 보면 부유한 나라의 국민이 가난한 나라의 국민에 비해 좀 더 행복하게 느끼는 경향을 보이기는 하지만, 양자 사이의 관계가 앞에서 본 경우처럼 명백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 문제와 관련해 우선 논의해 보아야 할 것은 1950년대 말과 1960년대 초 14개국에서 행해진 설문조사에 기초한 캔트릴〔Cantril(1965)〕의 연구결과다. 그는 각 나라 국민이 느끼는 幸福感의 정도를 0에서 10에 이르는 수치로 客觀化해 나타내고 있는데, 그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소득수준이 높은 나라일수록 이 수치가 더 높아지는 일반적 경향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스털린은 그와 같은 설문조사의 결과에 대한 캔트릴의 해석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이스털린에 따르면 所得水準과 사람들이 느끼는 幸福感 사이에 캔트릴이 말하고 있는 것 같은 명백한 관계가 존재한다는 결론을 내리기 힘들다고 한다. 〈그림 1〉은 캔트릴이 보고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로 그림으로 옮긴 것인데, 이를 보면 그와 같은 비판이 나오게 된 근거가 무엇이었는지를 바로 알 수 있다. 이스털린은 이 그림에서 인도와 미국 두 나라를 제외하면 소득수준과 행복감의 정도 사이의 관계가 매우 모호해진다는 점을 지적했다. 다시 말해 캔트릴은 인도와 미국 두 나라에 너무 큰 비중을 두었기 때문에 그와 같이 잘못된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 그의 지적이다.

그림을 보면 쿠바와 도미니카 공화국이 일반적인 추세와 동떨어진 예외적 경향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쿠바는 소득수준에 비해 예외적으로 높은 행복감의 정도를 보여 주고 있는 반면, 도미니카 공화국은 예외적으로 낮은 행복감의 정도를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이는 그 당시 두 나라의 政治的 狀況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 例外的인 경우로 보이기 때문에 소득수준과 행복감의 정도 사이의 관계를 따질 때 고려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할 수 있다.

이스털린은 우선 미국과 인도를 제외하고, 그 다음 쿠바와 도미니카 공화국까지 추가로 제외한 나머지 10개국의 경우만 놓고 볼 때 소득수준과 행복감의 정도 사이에 거의 아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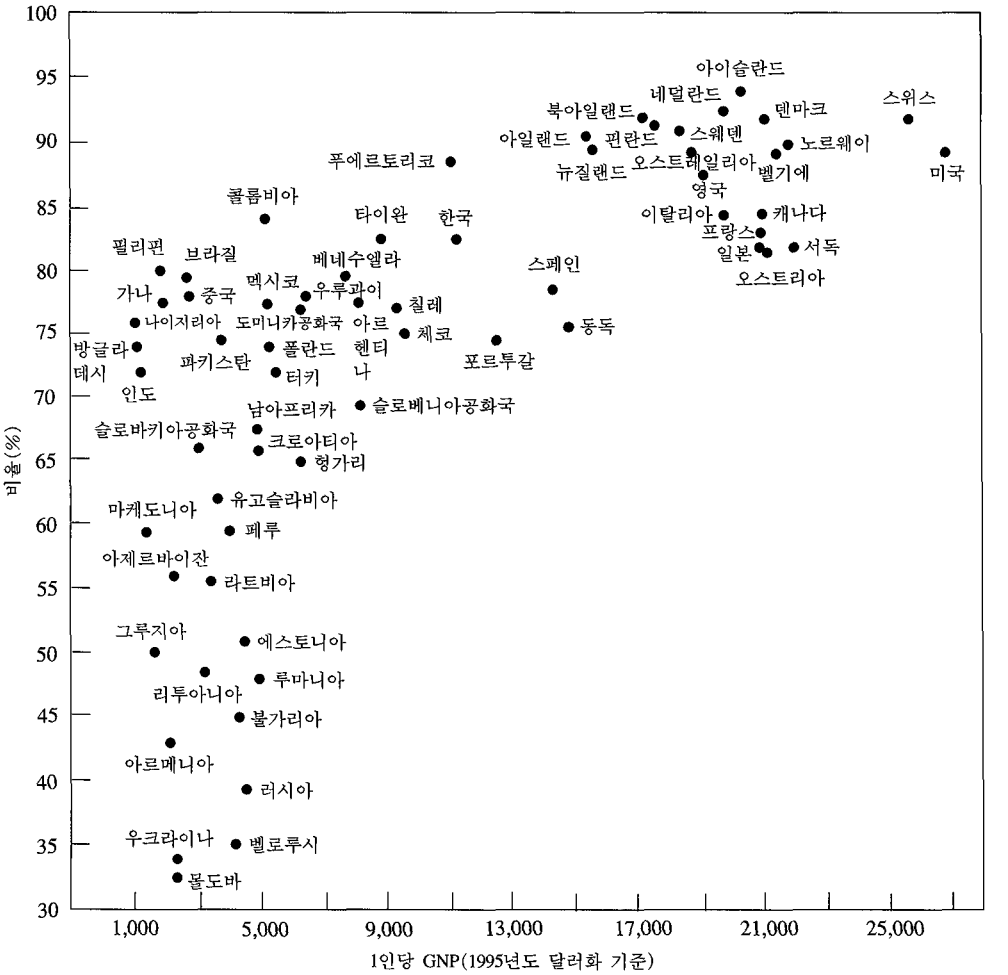
資料: Easterlin(1974).

〈그림 1〉 各國의 1人當 GNP와 主觀的 幸福感

런 相關關係가 존재하지 않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 10개국 사이에 엄청난 所得水準의 隔差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幸福感의 정도는 4.5에서 5.5에 이르는 좁은 띠 안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그림을 보면 서독의 소득수준이 나이지리아의 소득수준에 비해 10배 이상 더 높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느끼는 행복감의 정도는 거의 차이가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른 설문조사들의 결과를 보아도 어떤 나라의 소득수준과 그 나라 사람들이 느끼는 행복감 사이에 뚜렷한 상관관계를 발견하기 힘들다는 것이 이스털린의 주장이다.

잉글하트-클링거만[Inglehart and Klingemann(2000)]이 *World Values Survey*의 결과를 정리해 놓은 것을 보아도 소득수준이 높은 나라라고 해서 그 나라 국민이 더욱 행복하다고 말하기는 힘들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2〉는 1995년 현재 각 나라의 1人當 國民所得과 행복하다거나 만족스럽다고 대답한 사람의 비율 사이의 관계를 보여 주고 있다.(5) 이를 보면 소득수준이 낮은 나라들의 경우에는 소득이 커질수록 행복감의 정도가 급격하게 올라가지만, 1인당 국민소득이 대략 1만 달러 수준에 이르면 소득수준이 그 이상으로 올라도 행복감의 정도는 별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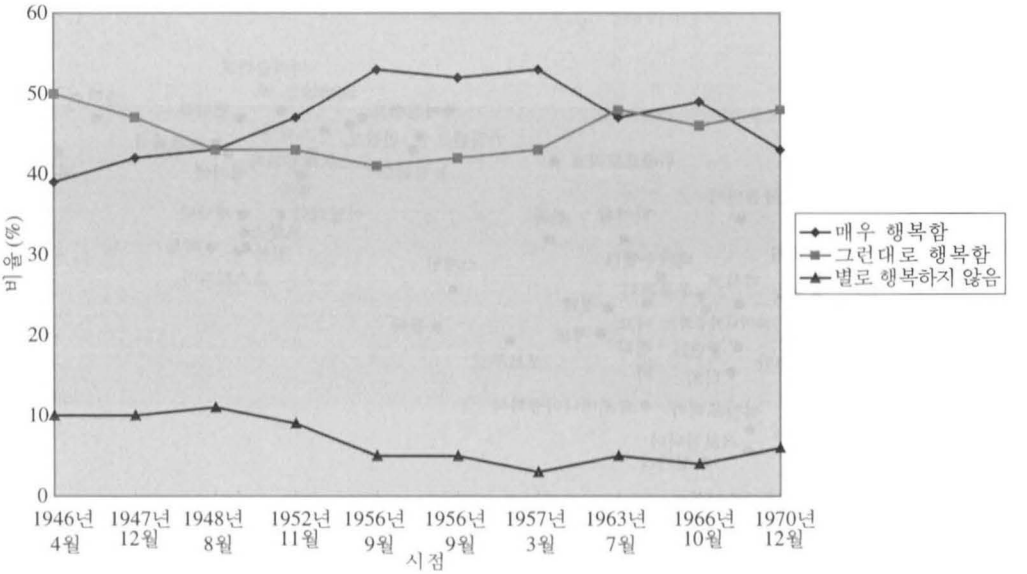
(5) 이 그림은 Inglehart and Klingemann(2000)에 등장하는 〈그림 7.2〉와 똑같게 그렸다.



資料: Inglehart and Klingemann(2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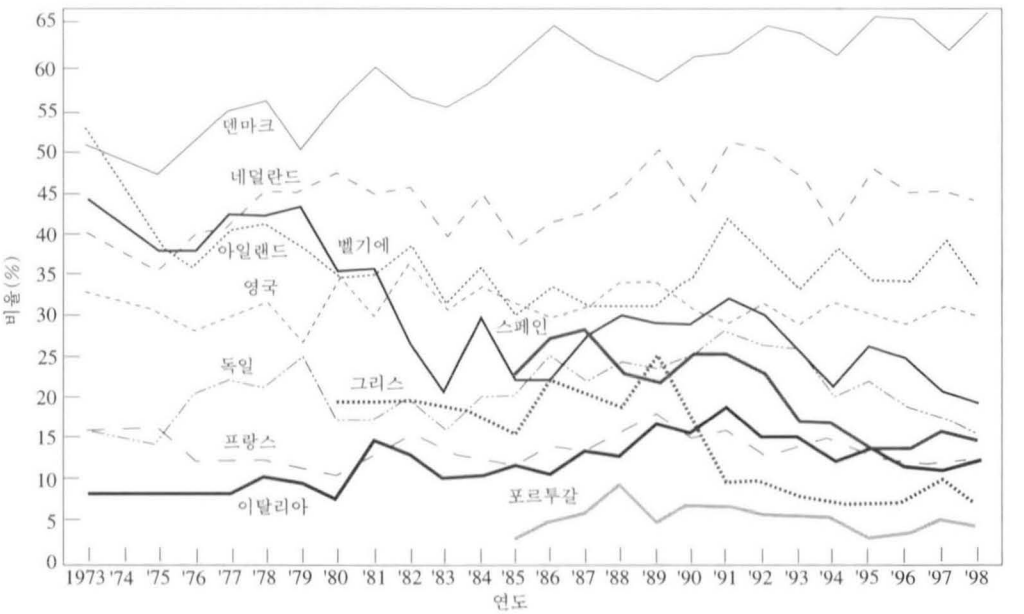
〈그림 2〉 各國의 1人當 國民所得과 主觀的 幸福感

세 번째 방법, 즉 어떤 한 나라를 대상으로 삼아 여러 시점에서 설문조사를 시행한 결과에 입각해 소득수준과 행복감 사이의 관계를 알아내는 접근법의 경우에도 양자 사이에 뚜렷한 상관관계를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 이는 經濟成長으로 인한 所得 增加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느끼는 幸福感에는 별다른 변화의 징후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것을 뜻한다. 〈그림 3〉은 미국 국민을 대상으로 한 행복감의 정도 설문조사 결과를 모아 이스털린이 정리한 표를 그림으로 옮긴 것인데, 이를 보면 왜 그런 결론이 나오는지 바로 알 수



資料: Easterlin(1974).

〈그림 3〉 美國 國民의 主觀的 幸福感 調査 結果(1946-1970)



資料: Inglehart and Klingemann(2000).

〈그림 4〉 各國의 主觀的 幸福感의 變化 推移

있다.[6]

이 그림에는 조사대상이 된 첫 시점인 1946년 4월부터 마지막 시점인 1970년 12월까지의 14년에 걸친 10회의 설문조사 결과가 요약되어 있다. 이 14년이란 기간 동안 미국 국민의 平均的 所得水準이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올라간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상황에 대해 幸福感을 느낀다고 대답한 사람의 비율은 거의 변화하지 않았음을 볼 수 있다. 특히 1957년에서 1963년에 걸친 기간과 1966년에서 1970년에 걸친 기간에는 매우 행복하게 느낀다는 대답을 한 사람의 비율이 오히려 떨어지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이스털린의 논문이 나온 이후에 이루어진 여러 연구들도 비슷한 결과를 보여 주고 있다. 예를 들어, 잉글하트-클링거만〔Inglehart and Klingemann(2000)〕이 Euro-Barometer 설문조사 결과를 정리해 만든 그림을 인용한 〈그림 4〉를 보면 조사대상이 된 11개국에서 현재의 생활에 '매우 만족한다'(very satisfied)고 대답한 사람의 비율에 거의 변화가 없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7] 조사대상이 된 1973년에서 1998년 사이에 國民所得이 몇 배나 높은 수준으로 올라갔을 텐데, 만족스럽다는 대답을 한 사람의 비율은 이렇다 할 上向趨勢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오히려 벨기에나 그리스같은 나라는 근래 들어 그 비율이 뚜렷한 下向趨勢를 보이고 있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마이어스〔Myers(2000)〕는 시카고대학의 National Opinion Research Center가 수행한 美國 國民의 主觀的 幸福感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이와 똑같은 양상을 발견할 수 있다. 즉 1인당 국민소득이 8천여 달러였던 1957년이나 2만 달러를 넘어섰던 1998년이나 '매우 행복하다'(very happy)고 대답한 사람의 비율은 30% 수준에서 거의 변화가 없다는 것이다.[8] 오히려 그 비율이 약간 줄어드는 추세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 마이어스의 지적이다. 소득수준이 두 배 이상 올랐는데도 미국 국민은 더욱 행복해졌다고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는 말이다.

또한 〈表 1〉은 디너-오이시〔Diener and Oishi(2000)〕의 〈表 8.3〉을 그대로 옮긴 것인데, 이를 보면 조사대상이 된 15개의 부유한 나라에서 소득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주관적 행복감은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는 현상이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발견할 수

(6) Easterlin(1974)의 〈表 8〉에서 제시된 수치를 사용하여 이 그림을 만들었다.

(7) 이 그림은 Inglehart and Klingemann(2000)에 등장하는 〈그림 7.1〉과 똑같게 그렸다.

(8) 이 방면의 연구로 가장 최근의 것이라고 할 수 있는 레이야드〔Layard(2005)〕를 보아도 지금까지 설명한 바와 전혀 다를 바 없는 분석결과가 소개되어 있다. 예를 들어 그가 쓴 책의 30쪽에 등장하는 그림은 미국의 경우 1945년부터 2000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1인당 국민소득은 3배 이상 증가했는데도 불구하고 "매우 행복하다."라고 대답한 사람의 비율은 30% 수준에서 맴돌고 있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表 1〉 各國의 經濟成長과 主觀的 幸福感

국가	주관적 행복감의 기울기	조사대상 연수	평균 경제성장율
벨기에	-0.04	19	2.6
덴마크	0.02	19	2.1
영국	-0.04	11	2.0
프랑스	0.01	19	2.4
서독	0.02	19	2.4
그리스	-0.01	12	2.8
아일랜드	-0.03	19	3.0
이탈리아	0.04	19	3.0
일본	0.01	22	4.1
룩셈부르크	0.03	19	
네덜란드	0.00	19	1.8
노르웨이	-0.03	4	3.4
포르투갈	0.09	8	3.0
스페인	0.03	8	2.4
미국	0.00	18	1.7
평균	0.007	15.7	2.4

資料: Diener and Oishi (2000).

있다. 表를 보면 각 나라에서 소득수준과 주관적 행복감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선분의 기울기가 거의 0에 가까운 값을 갖고 있으며, 심지어 음(−)의 값을 갖는 경우도 네 나라나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9) 기울기의 평균값이 0.007이라는 것은 조사대상이 된 나라들을 놓고 볼 때 所得水準과 主觀的 幸福感 사이의 관계가 거의 獨立的인 것으로 드러났다는 것을 뜻한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해 소득수준과 사람들이 느끼는 행복감 사이에 존재하는 관계를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定型化된 事實(stylized facts)로 정리해 볼 수 있다.

(1) 한 사회의 내부에서는 더 큰 소득을 가진 사람일수록 더욱 행복하다고 느끼는 경향이 있다.

(2) 어떤 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이 다른 나라의 그것보다 더 크다 해서 그 나라 국민이 더욱 큰 행복감을 느끼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하기는 힘들다.

(9) 기울기가 음의 값을 갖는다는 것은 소득의 증가와 주관적 행복감의 감소가 동시에 나타났음을 뜻한다.

(3) 어떤 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이 일정 수준에 이르면 이것이 커진다고 해도 사람들의 행복감은 더 이상 커지지 않는다.

이와 같은 정형화된 사실은 맹목적인 경제성장의 추구가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전략임을 시사해 주고 있다. 지금까지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단순히 평균적 소득수준이 높아진다고 해서 사람들이 더욱 행복하다고 느끼지는 않을 것임을 알 수 있다. 經濟的 福祉의 極大化를 위해서는 단순한 成長率의 極大化가 아닌, 이와는 다른 차원의 정책이 채택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경제적 복지의 극대화를 위해 선택되어야 하는 정책은 어떤 성격의 것이 될까? 이 의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는 더 많은 소득이 더 큰 경제적 복지로 이어지지 못하는 이유를 먼저 알아내야 할 것이다.

3. 왜 더 많은 所得이 더 큰 幸福을 가져오지 못하는가?

경제성장에 따른 소득 증가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느끼는 행복감에는 별 변화가 없는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를 한, 두 가지로 분명하게 밝히기는 어려운 문제다.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배후를 따져 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만드는 이유로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에는 무엇이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기로 하자.

첫 번째 이유로 소비수준이 올라가면 일시적으로 만족감이 증가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원래의 수준으로 돌아오는 경향이 있는 心理的 特性을 생각할 수 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자주 경험하는 바지만, 어떤 자극이 올 때 처음에는 이를 민감하게 느끼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 그 敏感性이 떨어지게 마련이다.(10) 경제성장 과정에서 소득이 늘어나고 이에 따라 더 많은 물질을 소비할 수 있을 때, 이것이 사람들에게 주는 만족감도 비슷한 경로를 걸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즉 처음에는 만족감이 커지지만 이에 익숙해진 단계에 들어서면 만족감은 원래의 수준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말이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期待水準(expectation level)을 계속 높여가는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높아진 소비수준에 만족감을 느끼기 힘든 측면도 있다. 예컨대, 경제성장의 초기 단계에서는 기본적인 물질적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매우 큰 만족감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일단 이 단계에 이르면 또 다른 물질적 욕구가 생기게 마련이고, 이와

(10) 심리학에서는 이와 같은 현상을 가리켜 '習慣化' (habituation)라고 부른다.

같은 과정을 통해 충족되지 못하는 욕구가 계속 만들어지기 십상이다.(11) 아무리 소득이 커져도 기대수준이 이에 맞춰 올라가면 사람들이 느끼는 행복감에는 아무런 변화가 생기지 않게 된다.(12)

레이야드[Layard(2005)]는 구체적인 통계자료를 인용해 실제로 얻는 소득이 더 커짐에 따라 생활에 필요하다고 느끼는 소득의 수준도 올라가는 경향이 있음을 지적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생활하기에 어느 수준의 소득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까?"라는 식의 질문에 대한 답은 사람들의 實際 所得水準이 올라감에 따라 그 금액이 더 커지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그는 이 금액을 '必要所得'(required income)이라고 불렀는데, 구체적으로 말해 실제의 소득이 1달러 더 커질 때 필요소득은 최소한 40센트 정도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소득이 커지는 만큼 사람들의 만족감이 더 커지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예컨대, 올해의 소득이 1달러 더 커진다면 내년의 필요소득이 40센트 더 커질 것이고, 이는 올해에 이룬 소득 증가의 40%가 (경제적 복지에 대한 기여를 하지 못하고) 저절로 사라지는 효과를 만들어낼 것이다. 극단적으로 실제의 소득과 필요소득이 1:1의 비율로 변화한다면 소득 증가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인식하는 경제적 복지의 수준은 전혀 향상되지 않는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

두 번째 이유는 어떤 사람이 느끼는 물질적 만족감이 자기 자신의 소비수준뿐 아니라 남들의 소비수준에도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 즉 物質的 滿足感에 相對的인 성격이 있다는 사실에서 찾을 수 있다. 유난히 질투심이 강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사람은 모두 남들이 어떻게 살고 있느냐에 관심을 갖고 있으며, 이렇게 자신과 남을 비교한 결과가 자신이 느끼는 물질적 만족감에 영향을 주게 된다. 자신의 생활에 만족해서 살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부유한 이웃이 얼마나 풍족하게 사는가를 본 순간 갑자기 불행하다고 느낄 수도 있는 것이 사람의 심리다.

이스털린(1974)은 마르크스(K. Marx)의 다음과 같은 말을 인용함으로써 사람이 느끼는 물질적 만족감에 상대적인 성격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 글을 읽어보면 우리의 심리 상태를 꼭 집어서 나타내주는 매우 적절한 묘사라는 생각이 든다.

---

(11) Diener and Oishi(2000)는 기업들 사이의 경쟁과 광고로 인해 사람들의 물질적 요구가 계속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말한다.

(12) 심리학에서 'hedonic treadmill'이라고 부르는 것이 이와 같은 상황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

"어떤 집이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다. 그 주위에 있는 집들이 그것과 똑같이 작다면 그 집은 주거 공간으로서의 모든 사회적 요구를 완벽하게 충족시켜 준다. 그러나 그 집 주변에 대궐 같은 집이 들어서는 순간 그 집은 오두막집으로 쪼그라들고 만다."

경제성장의 과정에서 빈부 격차가 그대로 유지된 채 국민의 소득이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것이 보통이다. 만약 사람들의 물질적 만족감이 앞서 말한 대로 상대적 평가에 많이 좌우된다면 빈부 격차가 좁혀지지 않는 상황에서 平均的 所得水準이 높아진다 해서 사람들이 더욱 행복해진다고 느끼기 어렵게 된다. 현실의 경제성장 과정에서 빈부 격차가 오히려 더 커지는 경우도 많은데, 이런 경우라면 사람들이 행복해졌다고 느끼기는 커녕 오히려 종전보다 더 불행해졌다고 느낄 가능성이 있다.

마지막 이유는 경제성장으로 인해 늘어난 소득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사람들이 느끼는 행복감에 차이가 있다는 사실에서 찾을 수 있다. 경제성장의 초기단계에서 소득의 증가가 경제적 복지의 향상으로 직결될 수 있는 것은 늘어난 소득을 기본적인 물질적 욕구의 충족을 위해 사용하기 때문이다. 반면에 성장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기본적인 물질적 욕구가 이미 충족된 상황에서는 늘어난 소득이 그와는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 복지의 증가로 이어지기 힘든 상황이 만들어진다.(13)

예컨대, 소득수준이 어느 정도에 이르게 되면 사람들은 追加的인 所得을 이미 소비하고 있던 물건들을 좀 더 高級化하거나 예전에는 소비하지 못했던 奢侈性 商品을 구입하는 데 주로 사용하게 된다. 이런 성격의 소비지출은 그 본질상 소비에서 오는 만족감을 크게 높여주지 못한다. 사람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기는 하겠지만, 아무래도 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물건들을 소비할 수 있게 된 데서 오는 만족감의 증가보다는 훨씬 더 작을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경제성장으로 인해 얻게 된 추가적인 소득 중 이런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중이 클수록 경제적 복지의 증가폭은 작아지게 되리라고 짐작할 수 있다.

필수품과 달리 사치품의 소비에서 오는 만족감에는 남들이 소비하지 못하는 것을 자신은 소비할 수 있다는 심리적 측면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그런데 사치품의 바로 이런 성격 때문에 이에 대해 소비지출을 늘려도 만족감은 늘어나지 않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남이 소비하지 못하는 것을 자신은 소비할 수 있다는 데서

(13) Veenhoven(1991)은 소득이 사람들의 타고난 욕구(inborn needs)를 만족시켜 주는 범위 안에서만 주관적 행복감 증진에 기여한다고 말한 바 있다. 따라서 이 욕구가 이미 충족된 상황에서는 추가적인 소득이 더 이상의 주관적 행복 증가를 가져오지 못한다고 한다.

만족감을 느낀다는 것은 消費에 相對的인 측면이 강하다는 것을 뜻한다. 쉽게 말해 이런 상품은 남들과 비교해서 더 좋은 혹은 더 비싼 상품을 소비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뜻이다.

허시〔Hirsch(1976)〕는 이와 같은 성격을 갖는 상품을 位置財(positional goods)라고 불렀는데, 위치재의 소비에서 오는 만족감은 다른 일반적인 상품의 경우와 그 성격이 매우 다르다.(14) 예를 들어, 일반적인 상품으로서의 자동차라면 아무 고장도 생기지 않고 편리함을 준다는 것만으로 만족감을 느낄 수 있다. 그러나 위치재로서의 자동차의 경우에는 이런 성격이 아니라 남들이 소유한 자동차보다 더 비싸고 사치스럽다는 점에서 만족감을 준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자동차에 대해 자부심을 갖고 있던 사람이라도 이웃 사람의 주차장에서 자신의 것보다 훨씬 더 비싼 자동차를 발견한 순간 그 자부심이 사라지는 것을 느끼게 된다.

프랭크〔Frank(1999)〕가 말하고 있는 誇示的 消費(conspicuous consumption) 欲求의 충족을 위한 지출도 이와 비슷한 성격을 갖고 있다. 그는 부유한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非誇示的 消費(inconspicuous consumption)를 통해 경제적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여지가 큼에도 불구하고 과시적 소비에만 열을 올리기 때문에 소득의 증가가 행복감의 증가로 이어지지 않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그가 말하는 비과시적 소비라는 것은 더 많은 여가, 더 좋은 건강, 더 쾌적한 환경 등을 얻기 위한 지출을 뜻하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 사람들의 경제적 복지가 크게 향상될 수 있음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사치의 극한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누가 더 비싸고 사치스런 상품을 소비하느냐를 둘러싼 경쟁은 끝없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성격의 상품, 즉 위치재의 소비에 지출되는 부분이 커질수록 사람들이 더 많은 소득을 얻게 되었는데도 만족감은 더 커지지 않는 현상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된다. 상당히 높은 소득수준을 달성한 나라에서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더 많은 소득이 더 큰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하는 결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지금까지 설명한 세 가지 이유 중 어떤 것이 현실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지를 판정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런데 政策의 觀點에서 볼 때 이 세 가지 이유 중 어떤 것은 관심의 대상이 되기 힘든 반면, 어떤 것은 매우 큰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예컨대, 첫 번째로 든 이유는 정책의 관점에서 그리 큰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소비수준이 높아지면 거기에 익숙해져 행복감이 줄어든다거나, 기대수준이 계속

(14) 위치재에 대한 자세한 논의를 위해서는 Hirsch(1976)을 보라.

높아지기 때문에 지속적인 만족감을 얻기 힘들다는 것은 人間 本性과 관련되는 문제다. 정책을 통해 인간의 본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범위는 매우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이유로 인해 행복감을 느끼지 못한다고 해도 정책당국으로서는 어찌 해 볼 도리가 없다.

이에 비해 두 번째 이유, 즉 물질적 만족감이 자기 자신의 소비수준뿐 아니라 남들의 소비수준에도 영향을 받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것은 정책적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측면을 어느 정도 갖고 있다. 分配의 상태를 좀 더 평등하게 만듦으로써 사람들이 좀 더 큰 행복감을 느끼도록 만들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이렇게 再分配라는 방법을 통해 행복감을 더 크게 만드는 것은 현실적으로 실천에 옮기기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어느 나라든 사정이 비슷하지만, 재분배 프로그램이 고작 할 수 있는 일은 빈곤의 증상을 완화해 주는 것 정도다. 경제성장 과정에서 발생하는 相對的 剝奪感을 줄이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강력한 재분배 프로그램이 도입되어야 한다. 빈곤의 증상을 완화해 주는 수준의 미온적 재분배 프로그램으로는 상대적 박탈감에 이렇다 할 변화를 가져오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 분배의 측면을 강조하는 정책 그 자체가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허다한 상황에서, 그 정도로 강력한 재분배 프로그램을 통해 문제 해결을 시도한다는 것은 현실적인 대안이 되지 못한다.

이에 비해 세 번째로 든 이유는 정책의 측면에서 흥미로운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적절한 정책대응을 통해 현저한 개선을 기대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말할 수 있다. 소득의 많은 부분을 위치재의 소비에 할애하고 있는 현실이 문제라면 소비의 흐름을 바꾸도록 적절하게 유도함으로써 경제적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자신의 소득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각 개인이 자유로이 결정할 일이라는 기본전제하에서 적절한 정책의 틀을 짜야 하는 문제가 있다. 사회 전체의 경제적 복지를 증진시킨다는 명분으로 個人의 自由를 침해하는 것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프랭크는 이 점과 관련해 消費稅(consumption tax)의 부과를 하나의 유력한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는 이를 통해 사람들로 하여금 誇示的 消費를 줄이고 좀 더 많은 貯蓄을 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현행의 所得稅를 消費稅로 바꾼다 해서 사람들의 소비행태에 과연 얼마나 가시적인 변화가 올지는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소비세의 채택은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을 뜻하는데, 지금까지 축적된 실증연구 결과에 비추어 볼 때 그와 같은 조처가 저축의 획기적 증가를 가져온다고 기대하기는 힘들다. 더군다나 소비세를 통해 사람들로 하여금 과시적 소비를 줄이고

비과시적 소비를 늘리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더욱 힘든 실정이다.

그런데 소비세가 되었든 다른 어떤 것이 되었든, 위치재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 어느 사회에서나 통용될 수 있는 일반적인 해답을 찾으려는 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 왜냐하면 위치재의 범주에 속하는 재화 혹은 서비스는 그 종류가 무척 많은데, 어느 시점의 어떤 사회인지에 따라 특정한 위치재의 소비가 상대적으로 더 두드러지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떤 한 사회에 적합한 정책처방을 찾기 위해서는 우선 그 사회에서 어떤 位置財가 어떤 맥락에서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는지를 알아내야 한다. 우리 사회의 문제를 논의할 때 역시 우리 사회만의 독특한 현실에 대한 진단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4. 우리 社會의 問題

최근 우리 사회에는 경제에 대한 지난날의 낙관적 태도가 자취를 감추어 버리고, 되는 일이 아무 것도 없다는 식의 불만이 점차 커지고 있다. 사실 우리 경제는 지난 몇 년 동안 상당히 심한 不況에 허덕여 왔으며, 불안한 노사관계나 극심한 투자 부진 등 여러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두 자리 숫자의 성장률을 당연하게 여겨오던 우리들인지라, 5%의 成長率도 기대하기 힘들다는 뉴스를 들으면 경제에 무언가 엄청나게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느끼게 된다.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당신은 현재의 생활에 대해 행복하다고 느낍니까?"라는 설문조사를 시행한다면 그 결과는 보나마나 뻔할 것이 분명하다. "몇 년 전에 비해 지금의 생활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더 나빠졌다."고 대답할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기본적 자유와 권리를 뺏기고 살아야 했던 開發獨裁 時代에 대한 향수가 심심치 않게 일고 있는 것을 보면 현재의 상황에 대한 불만이 얼마나 큰지 능히 짐작할 수 있다.

최근의 경제적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이와 같은 반응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국민이 좀 더 행복하게 느끼도록 만들 수는 없는 것인지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볼 여지는 있다. 지난 몇 년 동안 우리 경제가 침체에 빠져 있었다지만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지는 않았고, 그렇다면 최소한 몇 년 전에 비해 더 나빠졌다는 대답은 많이 나오지 않았어야 한다. 압도적 다수가 더 나빠졌다고 대답한다는 것은 經濟政策의 어딘가에 커다란 문제가 있었음을 시사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에서는 과연 무엇이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생활에 만족하지 못하

게 발목을 잡고 있을까? 여러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사람들이 늘어난 所得을 주로 位置財 구입에 사용하고 있는 것을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로 꼽을 수 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위치재 구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만족감은 그 본질상 지속적일 수 없다. 이웃이 자신보다 더 비싸고 화려한 물건을 사는 것을 보는 순간 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늘어난 소득의 대부분을 위치재 구입에 사용한다면 사람들이 느끼는 행복감은 더 커지기 힘들게 된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 소비지출 중에서 位置財에 대한 支出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커진다. 보석, 고급 의류와 장신구, 고급 자동차, 요트같은 상품에 대한 지출이 급격하게 늘어나기 때문이다. 심지어 소비지출의 대상이 되는 품목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도 실질적으로는 위치재에 대한 지출의 비중이 높아지는 결과가 빚어지기도 한다. 사람들의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서 생활필수품에서조차 高級化의 바람이 불게 되는데, 이와 같은 상품의 고급화는 위치재가 아니었던 상품을 위치재로 만드는 결과를 가져온다.(15)

최근 우리 사회에서도 이와 같은 消費 高級化의 현상이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다. 극심한 경기침체의 원인이 얼어붙은 소비심리에 있으며 고소득층이 지갑을 열지 않는 것이 특히 심각한 문제라는 진단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전반적 분위기하에서도 고급품에 대한 수요는 그 어느 때 못지않게 활발한 것을 볼 수 있다. 각 백화점이 경쟁적으로 소위 '명품 브랜드' 매장을 넓혀 가고 있는 것이 그 좋은 증거라고 말할 수 있다. 또한 자동차의 경우에도 대형차는 수요가 너무 커 없어서 못 팔 지경이며, 수입차의 판매실적이 역사상 최고수준에 이르렀다는 언론보도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16)

그런데 현 시점의 우리 사회에서 특별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위치재는 住宅과 私敎育이라고 생각한다. 소득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느끼는 행복감은 그리 커지지 않은 주요한 이유를 이들에 대한 막대한 지출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주택과 사교육 문제는 오래 전부터 우리 사회의 주요 현안 과제가 되어 왔으면서도 아직 해결의 실마리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 문제들이 이토록 오랫동안 미해결의 상태로 남아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정부나 국민이 問題의 本質이 어디에 있는지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 왔다는 사실에서 찾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국민이 흔쾌히 지지할 수 있는 제대로 된 대

(15) 유기농제품이 그 좋은 예인데, 똑같은 과일이나 채소라 할지라도 유기농 마크가 붙은 것은 보통 상품의 몇 배나 높은 가격에 팔리고 있다.

(16) 예를 들어, 2005년 10월 6일자 동아일보에서 '수입차 판매 사상 최대'라는 제목의 기사를 볼 수 있는데, 이 기사에 따르면 2005년 9월의 수입차 신규 등록 대수는 2,935대로 그 전해 9월에 비해 50.1%나 증가했다고 한다.

응책이 마련될 수 없었던 것이다.

예를 들어, 住宅 問題는 價格 暴騰에 대한 대책과 建設景氣 沈滯에 대한 대책 사이를 오가는 과정에서 비생산적인 표류를 계속해 왔다. 이 두 가지 대책은 그 속성상 서로 상반된 성격을 갖고 있어 하나가 다른 것으로 대체될 때마다 우리 사회와 경제는 마치 냉, 온탕을 오가는 것과 같은 극심한 혼란을 경험해야 했다. 한 때는 주택경기를 활성화한다는 명분으로 주택을 사게 만드는 온갖 유인책을 동원하다가, 주택 가격 폭등이 문제 되면 하루아침에 그 반대방향으로 정책을 바꿔 버리는 것 같은 일이 수없이 반복되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변덕스런 정책은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몰고 갔다. 住宅政策의 궁극적 목표가 무엇인지에 대한 뚜렷한 哲學이 결여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혼란이 빚어진 것임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다른 모든 정책과 마찬가지로 주택정책의 궁극적 목표는 국민의 경제적 복지를 가장 높은 수준으로 끌어 올리는 데 있다. 따라서 어떻게 하면 국민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가의 차원에서 주택정책의 기본 골격이 짜여져야만 한다. 이런 뚜렷한 목표의식 없이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 임기응변적 대응책으로 일관해 온 결과 오늘의 혼란을 빚게 된 것이다.

私敎育의 문제도 단지 이로 인한 家計의 經濟的 負擔을 줄여야 한다는 소극적 차원에서 추진되어 왔기 때문에 정책을 추진하는 데 탄력을 받을 수 없었다. 사교육의 내용이 어떤 것이며 따라서 사교육에 투입되는 비용이 어떤 효과를 내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없이, 다만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명분만으로 정책을 추진해 왔기 때문에 국민의 폭넓은 지지를 받지 못했던 것이다. 사교육을 줄이는 것이 모든 사람의 이익이 된다는 이론적 근거를 분명하게 밝히지 못한다면 이 문제 역시 한없는 표류를 계속할 수밖에 없다.

4.1. 住宅 問題

안정된 住居 空間의 확보가 행복한 삶의 전제조건이 된다는 것은 구태여 말할 필요조차 없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주택에 대한 지출은 경제적 복지와 직결되는 성격을 갖는다고 말할 수 있다.(17) 그러나 주택 구입에 사용된 모든 지출이 이와 같은 성격을 갖는 것은 아니다. 주택은 位置財의 성격을 강하게 갖고 있는데, 위치재로서의 주택과 관련된 지출은 뚜렷하게 다른 성격을 갖기 때문이다.

다른 모든 상품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주거 공간 역시 넓으면 넓을수록 더 좋다는 데 아무런 의문이 없다. 따라서 모든 사람들이 더 넓은 주거 공간을 갖기를 희망하는 것은

(17) 여기서 말하는 주택이란 좁은 의미에서의 주택, 즉 우리가 단독주택이라고 부르는 것 이외에도 아파트, 다세대주택 등 여러 가지 형태의 주거 공간을 통틀어서 일컫는 말이다.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안정된 생활을 위해 한 가정에 최소한도로 필요한 주거 공간은 그리 넓지 않다고 말할 수 있다. 예를 들어, 日本처럼 부유한 사회에서도 우리의 평균적 수준보다 훨씬 더 좁은 주거 공간에서 사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그런 상황이 그대로 지속되고 있는 것은 그 사람들이 현재의 주거 공간에 대해 그리 큰 불편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을 뜻한다.

최소한의 주거 공간을 초과하는 부분 역시 그것을 소비하는 사람에게 만족감을 주는 것은 사실이다. 그 만족감은 두 가지 범주로 나누어질 수 있다. 하나는 더 넓은 공간을 사용하는 데서 오는 편리함에서 나오는 것인 한편, 다른 하나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 더 큰 주택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에서 오는 만족감이다. 더 넓은 공간을 사용하는 데서 오는 편리함 역시 限界效用遞減의 法則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주택의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후자가 차지하는 상대적 비중이 더 커질 것이고, 이에 따라 位置財의 성격이 더욱 두드러지게 될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위치재로서의 주택에 쏟아 부은 지출은 단지 一時的인 滿足感을 주는 데 그친다. 앞에서 인용한 마르크스의 말처럼, 자기보다 더 큰 집에서 사는 사람을 보는 순간 그 만족감이 사라지고 말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더 큰 집 갖기 경쟁'은 국민의 경제적 복지 향상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 증가된 소득이 바로 이런 용도로 사용되는 한 우리들은 더 행복해졌다고 느끼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을 좀 더 행복하게 만들려면 위치재로서의 주택 문제를 무엇보다 우선 해결해야만 한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方案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 사람들로 하여금 더 큰 집을 사지 못하도록 직접적으로 막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선택의 자유가 보장된 민주주의 사회에서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돈을 쓰든 정부가 이에 대해 간섭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위치재로서의 주택 소비가 급격하게 늘어나지 못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합리적인 정책대응이 될 수 있다. 市場經濟의 기본틀을 깨지 않는 범위 안에서 주택의 大型, 高級化 추세에 제동을 거는 정책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市場의 自律을 강조하는 사람이라면 이와 같은 제안에 대해 즉각적인 거부 반응을 보일지 모른다. 그들에 따르면 어떤 종류의 주택을 생산, 공급하고 소비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시장이 알아서 해결할 문제이지, 결코 정부가 간여해야 할 일이 아니다. 더군다나 대형, 고급 주택에 프리미엄이 붙어 거래되는 현실은 시장이 바로 이런 종류의 주택을 원하고 있다는 명백한 신호이다. 그렇다면 이들의 생산, 공급을 억제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부추겨야 한다는 게 그들의 논리일 것이다.

그러나 주택같이 국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를 不完全한 市場機構에 전적으로 내맡길 수는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더군다나 우리처럼 토지의 부존이 풍부하지 못한 나라에서는 土地의 效率的 活用이 매우 중요한 정책 과제가 되지 않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보석, 고급 의류와 장신구, 고급 자동차, 요트 같은 위치재와 달리, 주택의 경우에는 政府가 어떤 방식으로든 介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정부가 주택시장을 일정한 방향으로 끌고 나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지라도, 최소한 어떤 방향으로 가도록 물꼬를 트는 일 정도는 해 주어야 한다.

위치재로서의 주택 소비에 제동을 걸기 위해 필요한 조처로 우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中, 小型 住宅의 생산, 공급을 장려하는 정책이다. 대형, 고급화된 주택이 많이 공급될수록 더 좋은 주택을 소유하기 위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이고 이에 따라 주택에 대한 지출이 한층 더 커질 것이 분명하다. 공급이 스스로의 수요를 창조한다는 말이 시대착오적인 느낌을 줄지 몰라도, 개별 시장의 경우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며 특히 주택시장과 관련해서는 더욱 그렇다는 느낌을 받는다.

사실 우리 정부는 다른 의도에서 중, 소형 주택의 생산, 공급을 장려하는 정책을 채택해 왔으나, 최근 이에 대한 사회적 비판을 의식해 이로부터 후퇴하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 정책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대형 주택의 공급을 억제해 가격 급등을 가져왔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들은 최근 우리 사회의 주택 가격이 주로 대형을 중심으로 급격한 상승세를 보인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정책의 산물이었다고 지적한다. 국민의 소득수준이 전반적으로 높아짐에 따라 주택서비스에 대한 需要도 늘어나기 때문에 大型 住宅의 供給을 함께 늘려 주지 않으면 價格이 暴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들의 논리다.

주택도 여느 상품의 경우와 똑같이 需要, 供給의 相互作用에 의해 그 가격이 결정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그렇기 때문에 대형 주택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그것의 공급을 제한하는 정책이 가격 폭등을 불러 올 것이라는 데 의문을 갖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렇지만 대형 주택에 대한 수요 증가에 제동을 걸 수 있다면 상황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최근의 대형 주택 가격 폭등은 需要側面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없었다는 데서 나온 결과라고 말할 수 있다.

대형 주택은 위치재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供給側面보다 需要側面이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위치재를 둘러싼 경쟁은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더욱 치열해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需要의 所得彈力性은 매우 큰 값을 갖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므로 소득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대형 주택에 대한 수요는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나게 된다. 더군다나

대형 주택은 投資手段으로서의 매력 때문에 그 수요가 한층 더 커진 측면도 있었다. 대형 주택에서 사는 것 자체가 큰 만족감을 줄 뿐 아니라 앞으로의 높은 수익까지 기대할 수 있으니 수요가 모두 그 쪽으로 몰리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다.

최근 대형 주택의 가격 폭등을 빚은 주요한 이유를 바로 이 폭발적인 需要 增加에서 찾을 수 있다. 대형 주택의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아 가격 폭등이 일어났다는 해석은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한 것이다. 문제의 핵심은 공급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수요에 있었음을 분명하게 이해해야 한다. 수요에 대한 이렇다 할 대책 없이 대형 주택 공급을 어느 정도 늘려 보았자 눈에 띄는 價格 安定 效果는 기대하기 힘들 것이 분명하다. 다시 말해 대형 주택의 가격 안정이라는 소극적 목표 달성이라는 측면에서도 수요의 적절한 통제가 필수적인 요건이라는 뜻이다.

그런데도 주택 문제 전문가를 자처하는 많은 사람들이 대형 주택의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그들이 입을 모아 한결같이 주장하는 것은 需要抑制 政策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供給을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가격은 수요와 공급의 상호작용에 의해 결정되는데 왜 수요가 아닌 공급에 의해서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다. 바로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대형 주택의 공급을 늘리는 정책은 가격 안정의 측면에서도 성과를 기대하기 힘들다. 나아가 위치재로서의 주택에서 파생되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정책은 결코 바람직할 수 없는 것이다.

위치재로서의 주택 소비에 제동을 거는 데 가장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정책은 大型 住宅에 대한 需要를 統制하는 것이다. 만약 그렇게 하려는 의지만 있다면 대형 주택에 대한 수요를 통제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이 문제는 주택에 대한 累進的 保有稅 부과를 통해 대형 주택의 조세 부담을 무겁게 만듦으로써 쉽게 해결할 수 있다. 대형 주택에 마치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냄으로써 이에 대한 수요를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는 기본적으로 가격기구를 통해 수요를 통제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시장의 교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물론 가격 신호를 교란하는 데서 오는 초과부담은 불가피하게 발생하겠지만, 이보다 더 큰 사회적 편익을 기대할 수 있다면 이는 기꺼이 감수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형 주택에 대한 수요를 통제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결정적 이유는 위치재로서의 주택에 대한 소비가 사람들에게 지속적인 만족감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데서 찾을 수 있다. 곧 스러질 만족감을 얻기 위해 아까운 자원을 소비하느니, 그것을 좀 더 지속적인 만족감을 줄 수 있는 용도로 돌리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우리가 주택이라는 위치재에 특별히 주목하는 것은, 이것이 우리 사회에 매우 희소

하게 부존되어 있는 土地와 불가분의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위치재를 둘러싼 경쟁은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지 못할 뿐 아니라, 희소한 토지를 불필요하게 많이 차지함으로써 남이 행복해질 수 있는 기회마저 박탈하는 결과를 빚게 된다.

위치재를 둘러싼 사람들 사이의 경쟁은 마치 容疑者의 딜레마(prisoner's dilemma) 게임과 같은 성격을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협조해 생활에 편안한 정도의 주거 공간만을 보유하는 것이 최선의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필요 이상으로 큰 공간을 선택함으로써 자원의 낭비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부유한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이 게임의 결과 빈곤한 사람의 입지가 점차 좁아지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는데, 바로 여기에서 정부가 개입해야 할 또 다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모두가 생활에 편안한 정도의 주거 공간만을 보유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이득이 돌아가는 相生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지금까지 주택과 관련한 정부의 정책은 오직 建設景氣 活性化와 住宅價格 安定이라는 두 가지 축에 기초해 수행되어 왔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경기가 부진한 양상을 보이면 무작정 주택 수요를 부추기는 정책을 쓰다가, 그것이 가격 급등으로 이어지면 서둘러 불을 끄기 위해 온갖 규제를 동원하는 악순환을 거듭해 왔다. 그 결과 우리 사회의 주택시장이 왜곡될 대로 왜곡된 기묘한 모습을 갖게 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주택정책의 기초가 되는 명백한 철학 없이 임기응변적인 대응으로 일관해 왔기 때문에 오늘의 혼란이 빚어진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住宅政策의 궁극적 목표는 국민 모두의 행복감을 더 크게 만드는 데 두어야 한다. 주택경기의 활성화라든지 주택 가격의 안정이 행복감과 무관한 것은 아니지만 그보다 더 직접적인 방법을 통해 행복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주택과 관련해 국민이 느끼는 행복감은 모두가 편안한 생활을 하기에 충분한 주거공간을 가질 수 있다는 데서 나온다. 이와 같은 상황을 실현하기 위해 정부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고민하는 과정에서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4.2. 私敎育 問題

우리 국민이 느끼는 幸福感을 떨어뜨리는 데 주택 문제 못지않게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私敎育*의 문제다. 해외로 이민을 떠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결심하게 된 동기가 무엇이었느냐고 물으면 가장 많이 드는 것이 바로 이 사교육 문제다. 이것만 보아도 우리 사회의 사교육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차원으로 치닫고 있는지 잘 알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밑 빠진 시루에 물 붓듯 사교육에 돈을 쏟아 붓지만 이를 통해 조금도 행복해

지지 못하는 불행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사교육에 아무리 많은 돈을 퍼부어 넣어도 전혀 행복해질 수 없는 것은 이것이 전형적인 位置財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갖는 위치재로서의 성격은 앞에서 논의한 住宅보다 더 강하다고 말할 수 있다. 남보다 더 많은 돈을 쏟아 부어 더 많이 점수를 올릴 수 있어야만 사교육은 비로소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남의 어깨 위에 올라설 수 있다는 데서만 의미를 가질 뿐, 사교육 그 자체가 주는 만족감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소비지출 중 사교육에 들어가는 부분이 더 커질수록 경제적 복지의 향상은 그만큼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웅{Ng(1978)}은 비록 私敎育뿐 아니라 일반적인 敎育 그 자체가 어느 정도 위치재의 성격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교육을 받는 목적이 더 능력 있게 보임으로써 졸업 후 좀 더 좋은 직장을 얻는 데 있다는 점에서 相對的인 성격을 갖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예컨대, 어떤 사람이 더 좋은 교육을 더 많이 받기로 결정했다고 하자. 그 결정 자체는 그 사람이 더 좋은 직장을 얻을 가능성을 높여 준다고 말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도 똑같은 결정을 한다면 그 사람이 더 좋은 직장을 얻을 가능성은 없어지고 만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교육 그 자체에 위치재의 성격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오직 대학입시에만 목표를 두고 있는 우리 사회의 私敎育은 正規 敎育에 비해 위치재로서의 성격이 더욱 강하다고 말할 수 있다. 정규 교육에도 위치재의 성격이 어느 정도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학생의 人的資本 형성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생산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반면에 사교육은 위치재로서만 의미를 가질 뿐, 그것을 받는 학생의 인적자본 형성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다. 잘 알다시피 사교육은 대학입시의 관문을 통과하는 요령만을 가르칠 뿐 지식이나 교양의 함양과는 거리가 멀다. 個人的인 관점에서 보면 대학입시의 관문을 통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성취일 수 있다. 그러나 社會的 관점에서 보면 인적자본 형성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사교육은 순전한 낭비일 뿐이다.

만약 모든 학부모들이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기로 합의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와 같은 변화가 교육의 측면에 미칠 실질적 영향은 아무 것도 없을 것이 분명하다. 똑같은 수의 학생이 대학입시의 관문을 통과하게 될 것이며, 학생들 전체의 인적자본 양에도 아무런 변화가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엄청난 사교육비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합의를 이루지 못하는 것일까? 이 경우에도 개별 학부모는 마치 容疑者의 딜레마 게임에 직면해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런 합리적 해결책이 실현될 수 없는 것이다.[18]

따라서 정부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 용의자의 딜레마 상황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도

움을 주어야 할 책임을 갖고 있다. 모두가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는 상황이 실현가능함을 보여 줌으로써 자기 혼자만 사교육을 받지 않기로 결정할 때 큰 피해를 입지나 않을까라는 두려움을 없애주어야 한다. 정부가 입으로만 사교육을 받지 않아도 되게 만들겠다고 떠들어 보았자 상황은 전혀 호전될 수 없다. 정말로 사교육을 받지 않아도 큰 피해를 입지 않는 상황을 만들기 전에는 낭비적인 사교육 경쟁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데 정부가 그 동안 취해온 私敎育 政策은 두 가지 점에서 문제를 안고 있었다. 하나는 왜 이 정책이 필요한지에 대한 명백한 哲學의 뒷받침이 없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政策의 手段을 잘못 선택했다는 것이다. 정부는 서민들의 생계비 부담을 덜어준다는 소극적인 자세로 사교육 정책에 접근해 왔다. 학원비를 올리지 못하도록 규제한다든가 고액과외를 단속하는 데 주력해 온 것을 보면 잘 알 수 있는 일이다. 그 동안 정부의 사교육 정책이 국민의 폭넓은 지지를 확보할 수 없었던 근본적인 이유를 바로 이런 소극적 자세에서 찾을 수 있다.

바로 앞에서 지적했듯 사교육 정책의 요체는 사람들로 하여금 낭비적인 경쟁에서 벗어나게 함으로써 좀 더 행복한 생활을 추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데 있다. 국민 모두가 이득을 볼 수 있는 協調的 均衡을 모색해 보자는 데 사교육 정책의 목표를 두어야 하는 것이다. 바로 이와 같은 명백한 철학의 뒷받침이 있어야 정책의 방향을 올바로 설정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국민의 폭넓은 지지를 확보할 수도 있다. 국민이 느끼는 행복감의 수준을 올리자는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목표가 제시될 때 모든 사람이 흔쾌히 그 정책을 지지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철학의 빈곤뿐 아니라, 적절치 못한 수단에 의해 사교육 정책을 추진해 온 것도 정책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게 만든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 동안의 私敎育 政策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接近法으로 요약될 수 있다. 하나는 사교육을 하지 못하도록 단속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려는 접근법이다. 사교육을 불법화하거나, 고액과외를 단속하는 등의 조처가 이 접근법에 속하는 것인데, 주지하다시피 이 접근법은 아무런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사회적 혼란만 부추기는 결과를 가져왔다.

또 하나의 접근법은 대학 入試制度에 손을 대 사교육의 필요성을 줄이려는 시도다. 바로 이런 의도에서 그 동안 입시제도를 수없이 손질해 왔으나, 이를 통해 얻은 가시적 성과는 아무 것도 없다. 입시제도를 아무리 바꿔 보았자 사교육은 여전히 성행하는 한편, 새 제도로 인해 빚어지는 부작용만 더욱 두드러지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 대표적인 예가

(18) 자기와 남이 사교육을 받고 받지 않는 경우에 각각 어떤 일이 생길지 생각해 보면 이 상황이 용의자의 딜레마 게임과 비슷한 성격을 갖고 있음을 바로 알 수 있다.

수학능력시험을 쉽게 출제하는 정책인데, 사교육 의존도는 떨어뜨리지 못하고 학생들의 學力 低下라는 심각한 부작용만 만들어내고 말았다.

정부는 이에서 그치지 않고 수학능력시험의 入試 反映度를 떨어뜨리는 정책을 추구해 왔는데, 이로 인한 부작용은 시험을 쉽게 출제하는 데서 생긴 것보다 오히려 더 컸던 것을 볼 수 있다. 수학능력시험의 입시 반영도를 떨어뜨리려는 시도는 대학으로 하여금 서류전형, 면접 혹은 논술 같은 방법에 의존하게 만들었다. 겉으로만 보면 시험점수만으로 줄을 세우는 획일적인 방법에서 탈피해 다양한 기준으로 학생을 선발하게 됨으로써 대단한 개선이 이루어진 것같이 보일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새 입시제도를 결코 개선이라고 부를 수 없는 수없이 많은 이유들을 발견할 수 있다.

제비뽑기를 하기로 결정하지 않는 한 어떤 입시제도를 선택하든 사교육은 뿌리가 뽑힐 수 없다. 특히 요즈음과 같이 불확실성이 더 커지는 방향으로 입시제도가 달라지면 사교육에 의존하려는 성향이 더 커질 수 있다. 시험성적에 의해 한 줄로 세우는 것을 지양하고 다양한 방법에 의해 선발하게 되었다고 자랑하지만, 그 다양한 방법 하나하나가 각각 별도의 사교육을 요구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19) 나아가 그 선발방식이 얼마나 큰 실질적 변별력을 갖고 있으며, 얼마나 공정하게 집행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결코 사소하게 넘겨버릴 일이 아니다.(20)

당연한 말이지만, 사교육에 대한 의존을 결정적으로 줄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公敎育을 充實化하는 것이다. 공교육이 충실해지지 않는 한 정부가 아무리 사교육이 필요 없다고 외쳐 보았자 아무 소용이 없다. 만약 정부가 그동안 사교육 정책과 관련해 이것저것에 쏟아 부은 노력을 오직 공교육 충실화에 집중했다면 지금쯤 상황은 크게 달라져 있었을 것이라고 믿는다.

그런데 공교육 충실화를 위해 해결해야 할 선결과제는 이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막대한 資源의 確保다. 문제는 공교육에 이렇게 많은 자원을 쏟아 붓는 것을 국민이 흔쾌히 지지해 줄 것이냐에 있다. 그렇지 않아도 국방이나 복지 혹은 사회간접자본 조성 등 돈을 써야 할 일이 많은데, 공교육에 그렇게 많은 자원을 쏟아 부을 필요가 있느냐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 것이다. 공교육의 충실화가 모든 국민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는 지름

(19) 최근 각 대학이 '통합형 논술'이라는 그 구체적 내용을 예상하기 힘든 전형방법을 선택하기 시작함에 따라 논술과외 붐이 일고, 심지어 월 1천만 원이나 되는 고액과외까지 등장했다는 것이 그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20) 예를 들어, 일부 대학은 영어로 대답하는 논술문제를 제시해 응시생의 학력을 측정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했는데, 영어만 잘 한다고 학력이 높다는 가정은 매우 위험할 뿐 아니라 공정성의 측면에서도 심각한 문제를 갖는다.

길이라는 선명한 논리가 제시되어야만 국민의 흔쾌한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다. 다시 말해 위치재로서의 사교육 문제를 공교육 충실화를 통해 풀려고 한다는 뚜렷한 청사진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5. 맺 음 말

經濟政策의 궁극적 목표가 국민의 經濟的 福祉, 즉 幸福感의 증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느끼는 행복감이 과연 무엇에 의해 결정되는지의 문제는 경제학에서 비교적 소홀하게 다루어져 왔다. 이 문제는 심리학자들의 연구 영역에 속해 있으며 경제학자가 관심을 가져야 할 문제는 아니라는 분위기가 지배해 왔다. 최근까지도 경제학자 중에서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지속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은 지극히 소수에 불과한 실정이다.

사람들로 하여금 행복감 혹은 불행감을 느끼게 하는 원인이 무엇인지를 탐구하는 일이 경제학의 본질에서 약간 벗어나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효과적인 경제정책의 수행을 위해서는 사람들이 느끼는 행복감이 경제 변수들과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 요건이다. 그 관계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국민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는 방법을 제대로 찾아낼 수 없기 때문이다. '幸福의 經濟學'이란 분야는 바로 이 당위와 현실 사이의 격차를 메우고자 하는 노력에 그 출발점을 두고 있다.

경제학자들의 사고방식에 따르면, 사람들은 소비할 수 있는 자원 혹은 상품이 더 많을수록 더 큰 만족감을 느낀다. 따라서 소비가능성의 확대를 가져오는 經濟成長은 당연히 사람들을 더욱 행복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기대한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 기대와 달리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느끼는 행복감이 예전보다 더 커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다. 이런 현상은 어느 한, 두 나라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의 부유한 나라에서 나타나고 있다. 소득이 어느 수준에 이르면 추가적인 소득이 사람들을 더욱 행복하게 만들어 주지 못하는 현상을 보편적으로 관찰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 사실은 經濟政策에 대한 우리의 기존 관념을 대폭 수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단지 경제성장을 극대화하는 데만 정책의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경제성장이 실질적인 경제적 복지의 증진으로 이어지게 만드는 데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말이다. 경제성장이 자동적으로 경제적 복지의 증진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으며, 경제적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만 한다.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더 행복해졌다고 느끼지 못하는 현상을 여러 가지 이유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중 우리의 관점에서 볼 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경제성장 과정에서 늘어난 소득 중 많은 부분을 位置財의 소비에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위치재는 그 본질상 자신의 것이 남의 것보다 더 좋을 때만 만족감을 주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지출은 단지 일시적인 만족감을 줄 수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위치재에 돈을 쏟아 부어 남들보다 더 높은 위치를 차지하기 위한 경쟁이 지속되는 한 경제성장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 수 없다.

우리 사회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위치재로 住宅과 私敎育을 꼽을 수 있다. 이에 대한 지출이 유달리 많은 데서 우리 국민이 행복해지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를 발견할 수 있다. 다른 사회에서도 이들로 인한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닐 것이나, 우리 사회의 경우 그 정도가 특히 심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들이 문제 되기 시작한 것이 어제오늘이 아니건만, 아직도 해결의 실마리조차 보이지 않는 것은 참으로 딱한 일이다. 이들이 미해결의 상태로 남아 있는 한 다른 어떤 것도 우리 국민을 크게 행복하게 만들 것 같아 보이지 않는다.

지금까지의 주택과 사교육 정책에서 이들이 位置財의 성격을 갖고 있다는 사실은 전혀 고려대상이 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의 초점이 제대로 맞춰지지 못했고, 고작 주택가격 안정이나 사교육비 부담 감소라는 소극적 목표를 추구하는 데 그치고 말았다. 이런 목표조차 제대로 달성하지 못한 상황이지만, 사실은 사람들이 느끼는 幸福感을 직접적으로 더 크게 만든다는 목표에 그 초점이 맞춰졌어야 한다. 이와 같은 뚜렷한 청사진이 제시되고 이에 맞춰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었다면 국민의 흔쾌한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었을 것이라고 믿는다.

위치재에 아무리 많은 돈을 쏟아 부어도 일시적 행복감 이상의 것을 얻을 수 없지만, 개인적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다. 다른 사람들이 위치재에 대한 지출을 줄이지 않는 상황에서 자신만 일방적으로 이를 줄이는 것은 행복감 증진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함께 位置財에 대한 支出을 줄이기로 합의하는 일이 중요하며, 政府가 이런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주도적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바로 이와 같은 역할에 政策의 초점을 맞출 때 우리 사회의 주택과 사교육 정책이 비로소 제자리를 찾을 수 있으리라고 믿는다.

서울大學校 經濟學部 敎授
151-742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산 56-1
전화: (02)880-6377
팩스: (02)886-4231
E-mail: joonklee@snu.ac.kr

参 考 文 獻

Argyle, M.(1999): "Causes and Correlates of Happiness," in D. Kahneman *et al.*(eds.), *Well-Being: The Foundations of Hedonic Psychology*, New York, Russell Sage Foundation.

Cantril, H.(1965): *The Pattern of Human Concerns*, New Brunswick, Rutgers University Press.

Diener, E., and S. Oishi(2000): "Money and Hapiness: Income and Subjective Well-Being," in E. Diener, and E. Suh(eds.), *Culture and Subjective Well-Being*, Cambridge, MIT press.

Diener, E., and E. Suh(2000): "Measuring Subjective Well-Being to Compare the Quality of Life of Cultures," in E. Diener, and E. Suh(eds.), *Culture and Subjective Well-Being*, Cambridge, MIT press.

Easterlin, R.(1974): "Does Economic Growth Improve the Human Lot? Some Empirical Evidence," in P. David, and M. Reder(eds.), *Nations and Households in Economic Growth: Essays in Honor of Moses Abramovitz*, New York, Academic Press.

_____(2002): *Happiness in Economics*, Cheltenham, Elgar Reference Collection.

Frank, R.(1999): *Luxury Fever*, New York, Free Press.

Frey, B., and A. Stutzer(2002): *Happiness and Economic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Hirsch, F.(1976): Social Limits to Growth,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Inglehart, R., and H.-D. Klingemann(2000): "Genes, Culture, Democracy, and Happiness," in E. Diener, and E. Suh(eds.), *Culture and Subjective Well-Being*, Cambridge, MIT Press.

Lane, R.(2000): *The Loss of Happiness in Market Democracies*,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Layard, R.(2005): *Happiness: Lessons from A New Science*, New York, Penguin.

Myers, D.(2000): *The American Paradox*,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Ng, Y.-K.(1978): "Economic Growth and Social Welfare," *Kyklos*, **31**, **4**, 575-587.

Veenhoven, R.(1991): "Is Happiness Relative?," *Social Indicators Research*, **24**, 1-34.